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8, pp.399-412
<https://doi.org/10.29212/mh.2018..108.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베트남전쟁 과거사 문제에 대한 두 가지 고민의 시선

전진성 저, 『빈딘성으로 가는 길』 (책세상, 2018)

이재태 저, 『옛 전적지를 찾아가다』 (전통족보문화사, 2015)

이신재*

1. 들어가며

한국군이 참전했던 베트남전쟁은 1973년 1월 27일 체결된 이른바 ‘파리평화협정’에 의해 종전되었다.¹⁾ 이 협정의 제5항은 협정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베트남에 주둔하던 ‘미국과 다른 외국군대’의 철수를 규정했고, 한국군도 3월 23일부로 베트남에서 철군하였다. 이로써 1964년 9월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으로 시작해 수도사단(맹호), 제9사단(백마), 해병 제2여단(청룡) 등 연인원 324,864명이 참전했던 한국의 베트남전쟁도 종결되었다.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1) 파리평화협정의 정식 명칭은 “베트남의 전쟁종식과 평화복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이다.

한국의 베트남전쟁은 끝이 났지만, 철군 45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우리 사회는 이른바 베트남전쟁의 과거사 문제에 빠져 있는 듯하다. 문제의 핵심은 전쟁 기간 중 한국군에 의해 베트남 민간인이 ‘학살’되었다는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주장이 ‘극단(極端)의 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80여건에 걸쳐 9,000여 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감시자(Watch Dog)로서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참전자 단체는 별도의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음해’라고 주장한다.²⁾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가? 혼란스럽기만 하다.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문제가 비단 최근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9년 5월 구수정 박사(이하 구수정)가 『한겨레 21』의 베트남 통신원 자격으로 이 문제를 기고하면서 부터였다.³⁾ 물론 구수정의 문제제기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1994년 『월간조선』에서 “월남인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연대장으로 복무했던 제9사단 29연대의 학살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⁴⁾ 그러나 구수정의 기고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다. 『월간조선』이 보도한 3명의 사망사건과 달리 구수정은 5,000여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고, 이후에는 9,000여 명으로 그 규모를 상향조정했다. 학살의 규모에서 충분히 관심을 끌만한 사안이었다. 그 결과 MBC ‘시사매거진’(1999.11), 월간 『말』 지(1999.12), KBS 2TV ‘추적 60분’(2000.1)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룬 책들도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⁵⁾

2)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파월한국군에 대한 음해의 진실』 (2018).

3) 구수정, 「아, 몸서리 쳐지는 한국군!」, 『한겨레 21』, 제256호(1999).

4) 유용원, 「월남인 학살사건」, 『월간조선』, 1992년 4월호. 한국군이 민간인 3명을 사살한 뒤 허위 보고한 사건으로 당시 소대장은 군사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평(評) 하려는 전진성 교수(이하 전진성)와 예비역 소장 이재태 장군(이하 이재태)의 책도 그동안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책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 과거사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진단과 고민, 그리고 해법을 제시한다. 역사학을 전공한 현직 교수와 참전자 출신의 예비역 장군이라는 저자들의 이채로운 경력만큼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참전문제에 관한 이른바 자유수호론과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시각의 차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⁶⁾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방법에서 두 저자의 생각엔 유사점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평자는 두 저자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시각의 차이 : 전진성과 이재태의 ‘빈딘성’

전진성과 이재태의 책에서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빈딘성’이다. 두 사람이 책의 제목과 배경으로 삼은 곳이 빈딘(Binh Dinh)성이기 때문이다. 전진성은 책의 제목에서 빈딘성을 언급하고 있고, 이재태가 찾은 ‘옛 전적지’도 바로 빈딘성이다.

빈딘성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이 주둔했던 베트남의 5개 성(省) 중 하나이다. 성은 우리의 도(道)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행정단위이다.

5)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에 관한 내용을 다룬 책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고경태, 『1968년 2월 12일』, 한겨레출판, 2015; 권현익, 『학살, 그 이후』, 아카이브, 2012; 김진선, 『산자의 전쟁, 죽은 자의 전쟁』, 중앙M&B, 2000;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2002; 이규봉, 『미안해요! 베트남』, 푸른역사, 2011; 이용준,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 조선일보사, 2003 등이다.

6) 이한우, 「한국의 베트남전쟁 연구」, 『아시아리뷰』 제3권 제1호(2013), 127쪽.

빈딘성은 남베트남의 중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곳의 성도(省都)인 꾸년(Quy Nhon)은 항구도시로 1965년 10월 한국군 수도사단이 상륙해 1973년 3월 철군할 때까지 주둔했었다. 전진성도 빈딘성을 다녀왔고, 이재태는 전쟁기간 빈딘성에서 두 차례 복무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보는 빈딘성은 우리 사회의 베트남 과거사 문제를 보는 시선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두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전진성은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기억과 약속을 찾아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전진성이 책을 쓴 목적이자 주장의 핵심은 책의 마지막부분에 있는 ‘감사의 글’에 잘 나타난다. 그는 ‘파월장병과 그 가족들이 베트남전 참전의 의미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재고해 볼 것을 권유하는 취지’로 책을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피땀을 바쳐 조국을 지켜냈다는 자랑스러운 기억에서 잠시만이라도 벗어나 전혀 다른 관점에서 펼쳐내는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책을 통해 참전자들이 ‘좀 더 넓은 사회적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베트남 과거사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참전자들을 논의의 장으로 등장시켜보려는 전진성의 시도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참전자들을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이자 동시에 국가에 의해 전쟁터에 동원된 ‘피해자’라는 시각이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을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참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오래 전에 대화의 장으로 나온 바 있었다. 민간인 학살문제가 고조되던 2000년 채명신 장군을 비롯한 참전자 단체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의해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었다.⁷⁾ 현재도 참전자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7) 군사평론가협회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공동개최한 토론회는 2000년 12월 15일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있다.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참전자들의 모습은 과연 우리 사회가 참전자들에게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주장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이재태는 전진성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다. ‘48년 만에 탐방한 노병의 수기’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500여 쪽에 달할 만큼 장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이 ‘학살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 이 책에는 수도사단이 처음 홍천에서 파병준비 과정을 마치고 베트남 끼년항에 상륙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빈딘성의 탐방내용을 기술하면서도 과거 사단사령부, 제1연대, 기갑연대 등의 주둔지와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담겨있다. 자신의 두 차례에 걸친 915일간의 파병기간 동안 주요 전투기도 적고 있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참전자들의 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태는 여기에 ‘특별부록’이라는 이름으로 “주월한국군의 양민 학살 진상을 규명한다”는 120여 쪽 분량을 추가했다.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1966년 1~2월 한국군이 빈딘성 빈안(Binh An)에서 베트남 민간인 1,004명을 학살했다는 시민단체의 이른바 ‘빈안학살’의 내용에 대한 ‘반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태는 ‘한국군은 과연 양민을 학살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렇지 않다’면서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적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전자의 시각에서 자신의 전투기록이기도 한 한국군의 전사기록을 인용하며 시민단체의 학살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재태는 자신의 연구결과 ‘학살은 없었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학살탑’ 지역을 ‘평화공원’으로 만들고, 현재의 베트남 주민들과 화해와 지원을 통해 낙후된 빈딘성 지역을 베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자는 구상도 밝혔다.

3. 민간인 ‘희생’ 또는 ‘학살’에 대한 진단

전진성은 한국군의 학살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의 학살에 대한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는 구수정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사나 진상규명을 위해 시도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전진성이 인용한 학살 주장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가는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가 인용한 구수정의 주장은 ‘남부베트남에서 남조선군대의 죄악’이라는 베트남 자료를 비롯해 각 성의 박물관, 당시 언론보도, 미국 퀘이커 교도의 논문, 그리고 자신이 직접 조사한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전자들은 과거 ‘적국(敵國)’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참전자들의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전쟁 당시 베트남(Vietcong)이라 불렸던 민족해방전선(NLF)이 작성한 문건들은 매우 과장되고, 부정확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966년 작성된 전투보고서의 경우 한국군 2개 대대를 전멸시킨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허위다. 이런 과장은 공산진영의 전쟁통계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6·25전쟁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자료에도 이 같은 과장은 확인되며, 베트남전쟁도 예외는 아니다. 전쟁 당시 발행된 북베트남과 베트남의 신문에 나오는 한국군의 ‘양민학살’ 보도에서도 허위나 과장이 마치 사실인양 보도되었다. 이것은 당시 북베트남과 베트남의 언론이 선전·선동의 목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도 확인된다. 일례로 1967년 2월 한국 해병대는 팜응아이(Quang Ngai)성 짜빈동(Tra Binh Dong)에서 연대규모의 북베트남군이 공격했을 때 243명을 사살하고 대승을 거둔 바 있다. 이른바 짜빈동 전투이다. 그러나 현재 짜빈동에는 북베트남군의 전승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고, 그 비문에는 한국 해병대 420여 명을 사살하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짜빈동에는 200여 명의 해병대 제11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승리와 패배를 떠나 420명 사살이라는 북베트남의 자료는 부정확한 것이다. 따라서 전쟁 당시 북베트남과 베트남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또 미국자료에서도 학살에 관한 내용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지만, 이 또한 문건의 제목은 대체로 ‘Alleged Atrocity’ 즉 ‘잔혹행위에 대한 의혹’ 정도로서 학살로 결론이 났다는 내용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전진성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한데 반해, 이재태는 한국군의 전사기록을 인용했다. 여기에 본인의 참전경험과 직접 연구한 결과를 반영했다. 학살문제에 대한 이재태의 주장은 매우 단호하다.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태의 주장도 일견 설득력은 있으나, 정말로 단 한명의 민간인도 피해를 보지 않았는가? 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드는 측면도 있다. 자신의 참전경험과 한국군의 전사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근거일지는 모르겠으나 역으로 한국군의 전사기록만으로는 자료의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군의 전사기록은 한국군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증거로 인정받기 힘든 측면도 있다. 또한 중대장이었던 이재태가 자신의 중대에서는 학살이 없었다고 한다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소속부대 이외의 전투상황에 대해서까지 모두 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모든 전쟁에서 민간인의 희생은 있어왔다. 6·25전쟁 당시에도 한국군은 13만여 명의 전사 및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민간인은 24만 여 명이 사망하고, 12만 여명이 학살되는 등 군인의 약 3배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⁸⁾ 채명신 주월한국군 초대사령관도 베트남전쟁에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때로는 순수 민간인이 살해

8)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군사편찬연구소, 2014, 30쪽, 265쪽.

될 수 있다면서, 그것이 전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⁹⁾ 이점에서 이재태도 ‘말단병사들의 과격한 행동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주민들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집단학살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참전자들을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진성의 주장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여기서 32만여 명의 참전자에 대한 다양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쟁 참전자 모두가 전투원은 아니었다. 전투부대와 비전투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작전은 전투가 절반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민사작전이였다. 혹여 학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전투에 참가한 모두가 ‘학살의 가해자’는 아닐 것이다. 또 참전의 동기도 다양할 것이다. 전진성이 책에서 기술했듯 그야말로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삶의 출구를 찾지 못한 가난한 농민의 자식들이 가족을 위해 나 한 몸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전쟁에 자원’ 했던 측면도 물론 있을 것이다. 냉전이 지배하던 시기에 국가의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전의 동기가 다양했던 만큼 참전자 모두를 국가 권력의 ‘피해자’로 일반화 시키는 것에는 반론이 따를 것이다. 참전자들의 결정과 선택,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인생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들

전진성과 이재태의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에도 불구하고, 하

9)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팔복원, 2013, 70쪽.

나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다. 전진성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진상규명’이라고 하였다. 일단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따져 묻지 않고서 서둘러 화해를 도모하는 것은 그저 책임회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태는 한결음 더 나아가 ‘학살 진상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문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제기하는 진상규명은 그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전진성이 주장하는 진상규명은 한국군이 가해자라는 전제하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참전자) 가해자로 몰아세우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가해자라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대가 겪었던 고통과 책임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해갈 필요가 있으며, 이럴 때만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도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서, “외부로부터 강요된 반성은 그저 굴욕일 뿐”이라고 적고 있다.

이재태의 ‘진상조사’는 참전 군인들의 ‘결백’을 배경에 깔고 있다. 그는 그 결백을 바탕으로 ‘정부와 군은 베트남 측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가 끝난 뒤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안하였다. 학살문제의 진상을 규명해 결백을 인정받고, 지원의 명분도 합당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명예회복과 참전기념탑 건립, 해외파병기념관 건립 등 명예선양과 처우 개선도 주장한다. 학살 의혹이 제기된 한국군의 일원으로서 학살의 누명을 벗고 당당히 참전자로서 대우를 받겠다는 ‘호소’인 것이다.

현재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 첨예한 대립과 주장의 혼돈 속에서 진상규명 만큼이나 상식적이고 당위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베트남 민간인 희생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는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한국군과 미군의

전사기록, 그리고 베트남의 희생자라는 사람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문제의 입체적 조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문제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진상 조사는 한·베 양국의 공동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 당사자인 베트남 정부는 1992년 수교이후 ‘과거는 덮고 미래로 나가자’는 입장아래 이 문제를 아직껏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만의 단독조사는 제한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가능성 측면에서도 벽에 막혀 있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이 문제는 현재 시민단체와 참전자 간의 ‘국내문제’로 비쳐지는 양상이다. 베트남에게 베트남전쟁은 승전이며 동시에 아픔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베트남의 입장도 이해의 여지가 있다.¹⁰⁾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베트남정부도 이 문제를 ‘관전자’의 자세로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베트남이 공동조사에 응한다고 하여도 진상규명은 매우 지난(至難)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과거 노근리 사건에서 엿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6·25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충북 영동의 노근리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했던 한국 피난민에 대한 학살사건을 공동 조사한 바 있다. 한·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해 양국에서 각각 30여 명의 조사관이 1년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의 경험을 참고한다면 한국과 베트남 간에 공동조사가 합의된다고 하여도 80여 건의 사건을 조사하는데 최소 80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다. 조사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면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학살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한국군이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했는지? 피해자는 누구인지?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10) 호티롱안, 「베트남의 베트남전쟁 평가」, 『전쟁과 유물』 제8호(2016), 80-82쪽.

여기에 만약 학살사건이 맞다면 당시 한국군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전쟁 당시 한국군은 전투와 비전투 활동으로 인한 베트남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보상을 목적으로 소청사무소를 운영했었다. 상당수의 사건들이 이 ‘제도’를 통해 해결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베트남 민간인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던 김○○ 소위 사건처럼 당시 한국군이 학살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고, 한국군의 군법체계는 어떻게 작동했는지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5. 나오며

흔히 냉전사(Cold War History) 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과거의 상대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들 한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상대의 행동과 의도를 훗날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쟁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역사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1997년 6월 미국은 전쟁의 상대였던 현재의 베트남과 이른바 ‘적과의 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베트남전쟁 지도부들이 베트남의 지압(Vo Nguyen Giap) 장군 등 당시 북베트남의 전쟁지도부와 하노이(Hanoi)에서 만나 자신들의 ‘옛일’을 회고하며 대화를 나눈 자리였다. 물론 이 자리가 성사되는 데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¹¹⁾

한국과 베트남 정부차원의 베트남전쟁에 관한 ‘적과의 대화’는 아직

11) 히가시 다이사쿠 저, 서각수 역, 『우리는 왜 전쟁을 했을까?: 미국·베트남 적과의 대화』, 역사넷, 2004.

것 없었다. 1991년 11월 주월한국군의 초대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과 당시 한국군의 ‘적’이었던 베트남 사이공지구 사령관 간에 ‘짧은 만남’이 있는 정도였다.¹²⁾ 일부 참전자 단체에서 참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한 바는 있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만일 정부 차원의 대화가 어렵다면 양국의 참전군인들 간에, 혹은 한국의 참전군인과 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의 베트남 주민들과의 만남도 가능할 것이다. 양국의 역사와 전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간의 만남도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사 문제를 넘어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평가에도 기여할 것이다. 철군한지 45년이 지났지만 아직껏 베트남전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된 평가는 부족한 것 같다. 그나마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 치열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진성과 이재태의 노력도 이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디스(John Lewis Gaddis)의 지적처럼 역사라는 풍경은 조금씩 제 모습대로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풍경위에서 베트남 참전의 공(功)과 과(過)도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 평가가 두 저자보다 베트남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누구의 진단과 주장이 옳고 그르다 할 위치에 있지 못함도 잘 안다. 그러나 지면을 빌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용어 사용의 문제이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사용하는 ‘민간인 학살’이란 용어는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성격과 정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이후에 부여해도 가능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민간인 희생’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2) 「총으로 만났던 두 사령관, 악수로 재회」, 『시사저널』, 1991년 11월 21일.

베트남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서는 참전자들도 수용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러한 출발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면 보다 발전적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빈딘성의 성도 꾸년시에는 전쟁당시 수도사단과 한진상사가 한·베트남의 친선을 기원하며 건립했던 ‘문화센터’가 남아있다. 그곳은 현재 빈딘성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박물관의 여러 전시실 중 한 곳에는 이 지역의 이른바 ‘증오비’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꾸년시는 현재 국방부가 위치한 서울의 용산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기도 하다.¹³⁾ 과거와 현재를 뗄 수 없듯 베트남의 빈딘성은 한국과 뗄 수 없는 곳일지도 모른다. 바라건대 한·베트남 간의 과거사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어 빈딘성에 양국의 친선을 기리는 새로운 ‘한·베문화센터’가 새롭게 등장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13) 서울시 용산구는 1997년 6월 26일 꾸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